

시론

개혁의 가장 위험한 적은 조급증이다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을 지나면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집권층 내부에서 과열음이 들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차기 집권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친명파’와 ‘친청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까지 비쳐지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권력의지가 분출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집권여당의 인적구조상 미래 구상을 두고 완전한 의견통합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외중에 치솟는 유가와 환율 불안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안보 불안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차간결해 개혁을 추진해도 모자랄 터에 벌써부터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혁은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정의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속도에만 매몰되는 조급증을 보일 때에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개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원인 또한 바로 이러한 개혁에 대한 조급증 때문이었다.

개혁 주체들이 임기내에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 이미 개혁의 방향은 정합성을 상실하고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은 물론이고, 그 정부에서 자행된 각종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특별검사’가 조직돼 활동했다. 그 가운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곳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없지 않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권력의 도구로 쓰여지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에 대한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범죄와 교묘해져 가는 수법에 비해 볼 때 그 모든 것을 경찰에게만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깊은 숙고와 고민이 필요하다.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권력의 시녀화 됐을 경우, 그 폐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일 수 있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권력 계층으로 퇴임 후에는 전 관료에 속해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담을 쌓은 법관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해 어떠한 형태든지 개혁의 갈을 대야 한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치원생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에도 삼세판으로 자리잡아올 만큼 오랫동안 자리잡

아 온 ‘삼심제’(三審制)의 기본 틀을 이토록 급작스럽게 바뀌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여론이 적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재판소원’(總判)의 근절 방안 같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실질적 사법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속도에 치우친 개혁은 자칫 정책의 정교함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나치게 거대한 담론에 치중된 개혁은 자칫 국민들의 일상과는 유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조급증은 자칫 개혁의 동력인 ‘도덕적 권위’를 훼손할 수도 있다.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절차적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가장 경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조급증과 도덕적 권위의 상실이었다. 그리하여 덩샤오핑은 개혁의 완성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개혁의 총설계사(總設計師)로 불리우는데 만족했으며 마지막까지 권력의 정점에 앉는 것을 마다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리더십 속에서 중국은 급진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조화되면서 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오늘날 G-2의 일원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支持)를 바탕으로 일부 급진 개혁론자들을 잘 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만이 그는 후대에 우리나라 개혁의 초석을 놓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재난 피해규모 고려하지 않는 지원금 지급은 잘못

광주 북구가 지난해 7월 500mm 넘게 쏟아진 ‘괴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 각 1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곳곳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북구는 중앙정부 기준에 따랐다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원 항목과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피해 규모나 매출 감소 등을 반영한 구제 내용은 없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원은 국비 70%-시비 12%-구비 18%로 마련되며, 세부 항목은 재난지원금 30(0)만원, 위급금 50(0)만원, 재해구호 20(0)만원으로 나눠졌다. 북구는 신청자 1천570명 가운데 금융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1천500명에게 1천만 원씩을 배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비슷한 위치의 가게라도 침수 정도와 영업 타격이 각기 상이한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한다. 북구비로 받은 1천만원이 많이 모자라 생색내기라며 불편한 마음도 드러냈다. 더러는 오히려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는

지자체가 임의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거나 차등화 여부를 결정할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피해 수준별로 지원 금액을 상응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행대로면 실질 복구가 힘든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애초에 일괄 산정은 잘못된 것이다. 경기 침체, 소비 부진으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상식선에 어긋난다. 규정 탓만 해서는 안된다. 정부에 민생 현안으로 계속해 건의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재난피해 신고도 그렇고, 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잠정 피해액을 산출하는 만큼 근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순간 불가항력적 피해를 당했다면 조속한 재기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지급처별 경증을 가리지 않을 시 2차 피해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행정 편의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제한된 범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진도 주민도 ‘바람연금’, 재생에너지 확장하는 전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도 해역 2개 단지(3.6GW)를 포함해 전국 7곳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신규 및 변경 지정했다. 신안은 3.7GW로 확대됐다. 진도의 시설 용량만 원자력 발전소 3~4기와 맞먹는다. 전남은 총 7.3GW 규모의 초대형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중대 전환점에 섰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해 공동접속설비 건설 등을 추진한다. 진도는 단일 단지로 최대인 신안과 비견될 정도의 프로젝트로 2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며, 향후 20년간 발생할 직접 수익금은 배당금과 지원금을 합하면 1조8천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건설비의 4%를 투입할 경우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인종 수익금(바람연금)은 1조4천억원으로, 관내 1만6천329세대 기준 배당금만 연평균 4,300원에 이른다. 선로 경과지인 해남군 역시 3천900억원(연간 199억8천만원)의 수혜가 가능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남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진도의 경우엔 지난해 10월 사업 신청 후 반년 만의 값진 성과다. 다른 지역이 심수 년간 매달렸던 노력에 비하면 가히 이례적이다.

지역 주민·어업 종사자·지자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승적 동의 하에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다. 연쇄적인 경제 파급 효과와 대규모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일부 해역에 대한 군 작전성 협의 등 중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만큼 집적화단지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남은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전력해야 할 것이다.

기고



나은영
초당대학교 교수

얼마전 지인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큰마음을 먹고 헬스장을 찾았다가 트레이너가 건넨 ‘어머니’라는 한마디 때문에 당황했다고 한다. 비혼인 지인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생경했을 것이다. 아니, 생경함을 넘어서는 당혹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 결혼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요”라고 정색하며 말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일화는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오히려 익숙한 장면이 아닐까. 우리는 식당, 병원, 상점, 운동 시설, 공공 기관 같은 일상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말을 건네기 위해 먼저 상대를 어떻게 부를지 정한다.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 이모, 학생, 선생님” 등 대부분은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다.

하지만 호칭은 단순한 부름말 이상의 의미

호칭의 그늘

를 지닌다. 그것은 상대를 어떤 범주에 놓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이, 성별,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위치 같은 여러 정보가 짧은 한 단어 안에 함께 담긴다. 우리는 상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한 틀을 빌려 말한다. 그 덕분에 대화는 편해지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50대 여성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그 말에는 결혼과 자녀가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20대 여성에게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남성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비슷하다. 이런 표현들은 공손함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게 한다. 만약 그 이미지와 실제 삶이 다르다면, 상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명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는 점이다. 듣는 사람도 대개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긴다.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반복되면 마음에 은근한 파리가 쌓이기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매번 설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 혹은 설명하지 않기 위해 잠시 망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관계 중심적인 언어로 알려져 있다. 이름 대신 관계나 역할을 앞세워 부르는 문화는 공동체적 친밀함을 만들어 왔다. 낯선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면 거리감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언어문화에는 분명 따뜻한 면이 있다.

다만 사회가 다원해질수록 이 방식은 때때로 누군가를 일정한 틀에 얽매게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다. 1인 가구가 늘고 비혼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됐으며, 직업과 생활 방식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우리의 호칭 습관은 여전히 과거의 익숙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물론 낯선 사람을 부를 때 적절한 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익숙한 표현을 선택한다. 다만 그 말이 상대의 삶을 미리 짐작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번쯤 떠올려 보는 것, 그 정도의 작은 생각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헬스장에서 건넨 “어머니”라는 한마디는 금세 지나가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잠깐 멈춰섰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말속에 어떤 전제가 담겨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본다면, 일상의 대화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 될지 모른다.

현장칼럼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길을 걷다보면 버려진 담배꽂이를 곳곳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이미 꺼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불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면 그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화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최근 5년간 장흥군에서는 총 467건의 화

버려진 담배꽂이 하나가 화재의 시작이 된다

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도 약 50억원에 달한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불철에만 130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담배꽂이 투기, 야외 취사 후 불씨 방치 등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며, 이러한 부주의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담배꽂이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 것,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것, 야외 활동 후 불씨를 확인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이 화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캠핑이나 야외 취사 시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살피고,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부주의가 쌓여 만들어지는 재난이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이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화재 예방 홍보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이 하나를 제대로 끄는 작은 실천이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버려진 담배꽂이 하나가 화재의 시작이 된다.

그래픽 뉴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025년 9월 22일~10월 21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폭예방 22만 명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응답률 76.6%)



피해 유형별 전체 피해자 기준, 복수응답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이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먼저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교생 평균 3.0%였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학폭 피해 응답률은 2.5%였다. 다만 1차는 전수조사였던 반면 2차는 표본조사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학교급별 학폭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피해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사이버폭력(6.8%) 순이었다. 스토킹(6.6%)과 성폭력(5.1%) 비중도 작지 않았다.

피해 응답률과 달리 가해 응답률은 초·중·고교생 평균 1.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이 1.9%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0.9%, 고등학생 0.2%였다. 학폭 목격 응답률은 7.7%였고, ‘목격 시 감정’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예부, 지역특집부, 사진실, 설실, TV본부, 서울지사,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부, FAX, 광고국, 편집국, 업무국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